

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

-총론: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-

2021. 7. 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인구구조 변화 현황	1
II.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·사회에 미치는 영향 ..	5
III.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과	7
[참고 1] 제1·2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	8
IV. 제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 : 4+ α 전략 ...	9
[참고 2]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상 특징	11
V. 주요 추진과제	13
1. 인구절벽 충격 완화	13
2. 축소사회 대응	16
3. 지역소멸 선제 대응	19
4.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20
+ α .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	21
VI. 향후 발표 및 추진계획	22
[참고 3] 인구 TF 1,2,3기 과제	24

I. 인구구조 변화 현황

◇ ①인구감소, ②지역소멸, ③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'20년 기점으로 **금년부터 본격화** 될 전망

① [인구감소] 출산을 감소 → '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

- '15년 이후 저출산 기조 악화*되며 '20년 **합계출산율 0.84명** 기록 → 3년 연속 1 하회**,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(198개국 중 198위)
- * '15년 대비 '20년 합계출산율 32.3% 감소, 출생아수 37.9% 감소
- ** **합계출산율**: ('18) 0.98 ('19) 0.92 ('20) 0.84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
- 출생아수는 '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40만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에 30만명을 하회하며 '20년 **출생아수 27.2만명** 기록
- **코로나19** 등 인한 혼인지연으로 출산율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

<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>



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< 혼인건수 추이 >



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-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*하면서 '20년 처음으로 **인구 데드크로스 기록**

* 사망자수(만명): ('05) 24.6 ('10) 25.5 ('15) 27.6 ('20) 30.5(→ 최초 30만명 초과)

- 향후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**빠른 속도로 감소***하여 50여년 만에 1,200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('19 → '67년)

* '19년 → '67년 인구감소를 24.0%, 인구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(전세계 235개국 중 17위)

< 인구 자연증감(출생자수-사망자수) >



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< 절대인구 변화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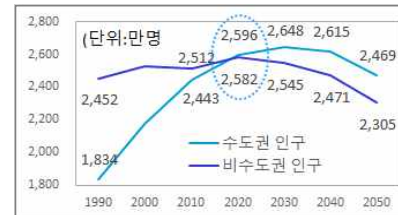
② [지역소멸] '20년 수도권-비수도권 인구 역전, 소멸위험지역 증가

-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'20년 처음으로 **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**

-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*하며 '20년 **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5개(46%)**에 육박 → 지역소멸 문제 가시화

* 소멸고위험지역 비중(%): ('13) 0.9 ('14) 1.3 ('15) 1.8 ('16) 2.2 ('17) 3.1 ('18) 4.8 ('19) 7.0 ('20) 10.1

< 수도권-비수도권 인구변화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>



*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

③ [초고령사회 임박] '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→ 고령화 가속

- 베이비붐 세대('55~'63년생, 710만명)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→ '25년 **초고령사회 진입 예상**

- '30년 이후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며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, 중위연령*은 '65년 62.2세까지 상승

* 중위연령(세): ('60) 18.9 ('80) 21.4 ('00) 31.8 ('20) 43.7 ('40) 54.4 ('65) 62.2

- **노년부양비**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('19→'67년 +81.9) 하여, 2위 국가와 30% 이상 차이나는 **1위 국가*** 될 전망

* 노년부양비(=65세 이상 인구/15~64세 인구, '67년 기준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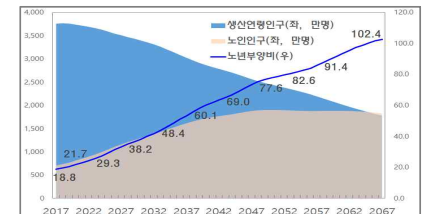
(韓) 102.4(1위) (대만) 77.5(2위) (日) 75.6(3위) (알바니아) 71.8(4위) (세계평균) 22.1

< 고령층 내 연령구성 변화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노년부양비 추이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과거와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차이 >

① (가속화 국면 진입) 변곡점 지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

< 3대 인구리스크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전망 >

구분	2020년	2030년	2040년	2050년	2060년
인구자연감소 (만명)	-3.3	-6.4	-25.4	-46.9	-55.0
수도권-비수도권 인구격차 (만명)	14	103	144	164	178
고령층 비중 (%)	15.7	25.0	33.9	39.8	43.9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② (예상보다 빠른 변화) 실제 변화가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중

- 급격한 저출산 기조 반영 위해 특별추계('19)를 실시해 인구전망을 수정했으나, 실제 변화는 이보다도 빠르게 전개

< 합계출산율 전망-실적치 차이 >

	'18년	'19년	'20년
실적 (A)	0.98	0.92	0.84
전망 (B)	0.98	0.94	0.90
차이 (A-B)	0	-0.02	-0.06

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, 장래인구추계

< 출생아수 전망-실적치 차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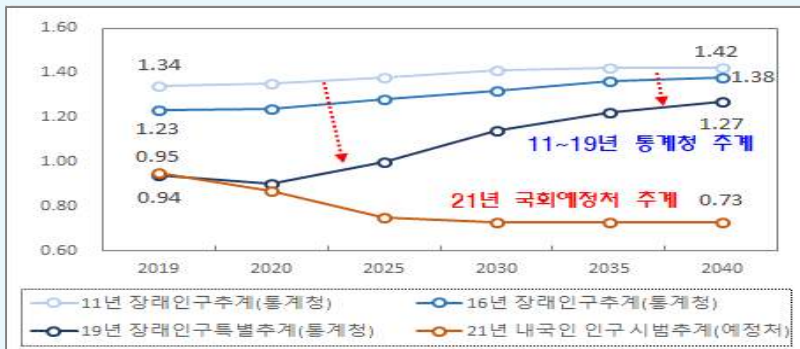
	'18년	'19년	'20년
실적 (A)	32.7만	30.3만	27.2만
전망 (B)	32.5만	30.9만	29.2만
차이 (A-B)	0.2만	-0.6만	-2.0만

*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, 장래인구추계

③ (반등 가능성 하락) 향후 출산율 회복 전망한 기존 견해와 달리 저출산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*도 제기

*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합계출산율 회복을 전망한 기존 분석(통계청, '19년)과 달리 '20년 0.87명 → '40년 0.73명까지 지속 하락 전망(내국인 인구 시범추계, '21년)

< 합계출산율 전망 변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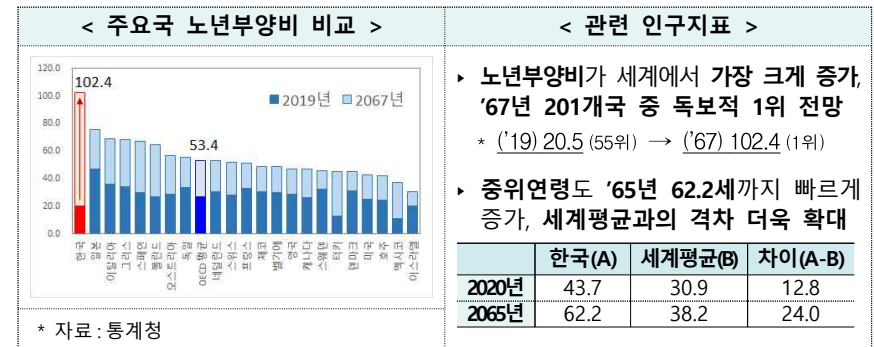
* 자료: 통계청,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

참고 1 주요 인구지표 국제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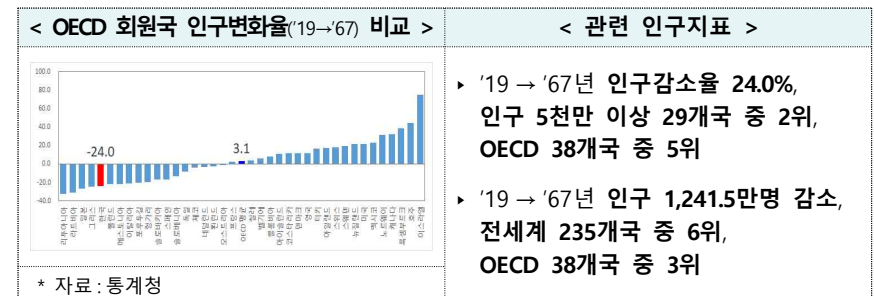
□ (저출산)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세계 최하위



□ (고령화) 고령층 비중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 → 향후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



□ (인구감소)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, 극심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감소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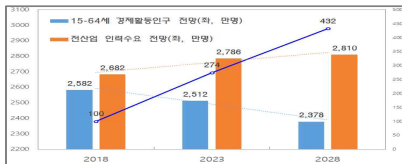
II.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·사회에 미치는 영향

- ① 변화의 영향은 아직 일부 영역에 한정되고 영향력도 제한적
- ② 하지만 앞으로 경제·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미치게 되고,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우려

① [노동공급 감소]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

- 생산연령인구(15-64세)는 '67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*
→ 고령인구(65세 이상)보다 적은 수준으로 노동공급 감소 우려
* 생산연령인구(만명): ('21) 3,713.3 → ('67) 1,784.2 (↔ 65세 이상 인구 1827.1만명)
-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(25-49세)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*되어 노동공급 감소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
* 연령별 인구감소율('21→'67년, %): (15-24세) △53.6 (25-49세) △56.5 (50-64세) △44.3

<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전망 >



* 자료: 고용부 '18-'2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

< 잠재성장률 전망 >



*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(2020)

② [부문별 축소]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·비효율 발생

- 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·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,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라 급격한 조정 거칠 우려
▪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고, 인력부족·고령화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 필요
- 가족 구성은 1.2인 가구가 증가하고, 비혼동거·출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빠르게 바뀌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
* 비혼동거 동의율(%): ('08) 42.3 → ('12) 45.9 → ('16) 48.0 → ('20) 59.7

< 대학 학령인구·정원 변화추이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, 교육기본통계 활용

< 가구원수별 비중 변화 >



* 자료: 통계청 장래가구추계

③ [지역불균형]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,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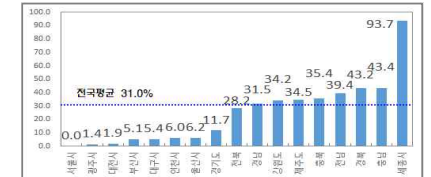
-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경험
▪ 지역 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·교육·문화·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악화 초래
-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·교육비 부담 증가, 청년층 결혼·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

< 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>



* 자료: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

< 응급의료시설 10km 밖 거주 취약인구 비율 >



* 자료: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

④ [지속가능성 저해]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·건강권 보장요구 급증

- 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 초래
▪ 4대 공적연금* '40년 적자 전환, 건강보험 '24년 적립금 소진** 등 재정건전성 악화, 세대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
*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
**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전망(조원): ('22) 10.5 ('24) 12.3 ('26) 14.3 ('28) 15.7
- 고령인구 증가에 기대수명·건강수명 격차도 확대*되면서 요양·돌봄,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
* 기대수명·건강수명 차이(세): ('00) 7.9 ('05) 8.3 ('10) 8.8 ('15) 9.3 ('16) 9.4

<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>



*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< 노인 사회서비스 경험·희망비율 >



* 자료: 사회서비스 수요·공급 실태조사

▶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·사회에 대규모 충격 및 조정비용 초래하기 前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수적

Ⅲ.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과

◇ 그간 1·2기 인구정책 TF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 마련 노력

□ [경과]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구정책 TF 구성·운영

- '19.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이전 추계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 반전이 어렵다는 점 확인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①출산을 제고 대책에 더해,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②적응력 강화 대책도 두트랙으로 추진
- ☞ '19년~'20년 두 차례 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·운영

- ▶ (1기 TF) '19.4월 출범 → '19.9~11월, 4개 전략·20개 과제 순차 발표
- ▶ (2기 TF) '20.1월 출범 → '20.8월, 4개 전략·11개 과제 발표

□ [한계]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및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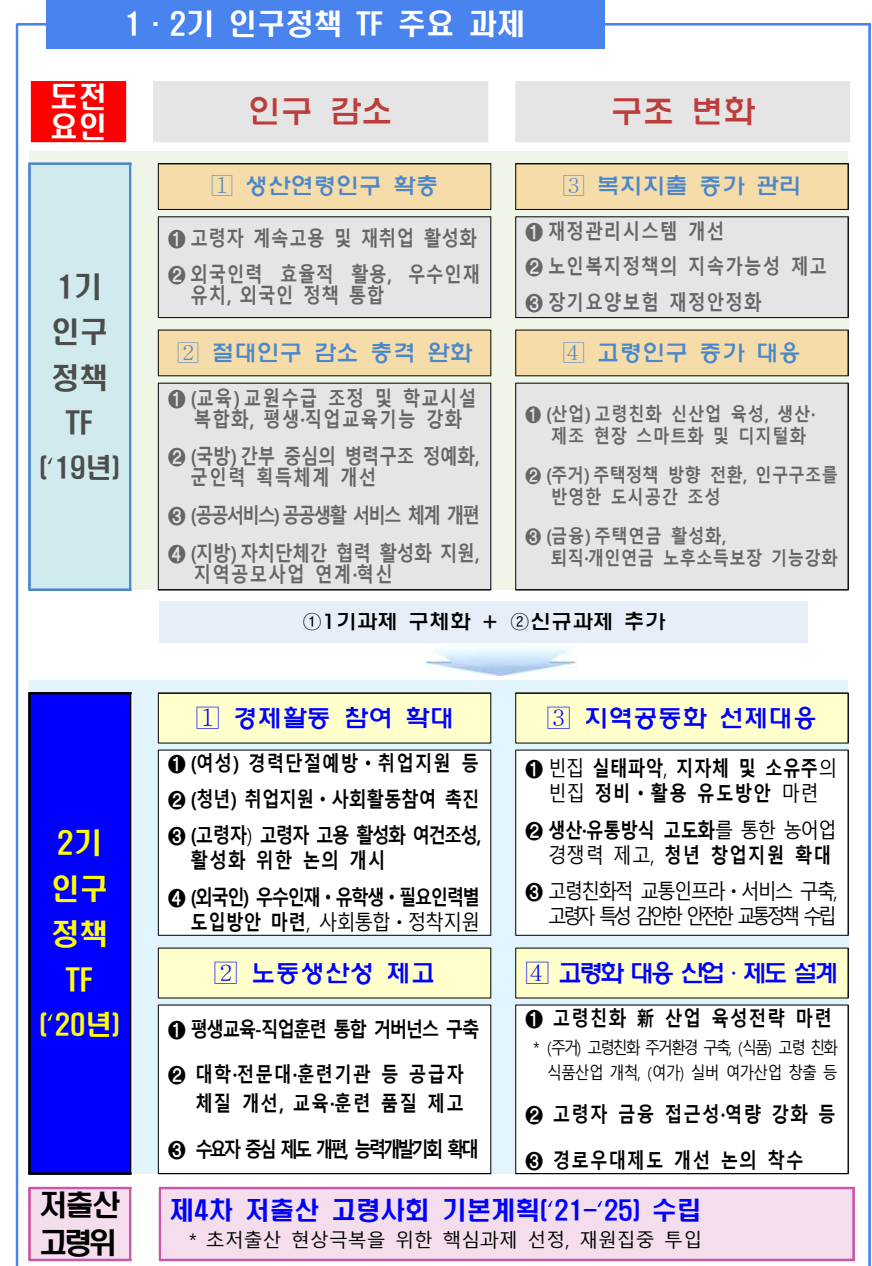
-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, 이로 인한 경제·사회 전 분야 영향 확대로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
-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①1·2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, ②구체화가 필요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
- ▶ (1·2기 미포함) 다양한 고용형태 대응, 대학경쟁력 강화, 가구형태 다양화 대응, 포괄적 지역소멸 대응 방향,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
- ▶ (구체화 필요) 고령자 고용 활성화, 외국인력 부족 대응, 평생학습 지원 등
- 향후 큰 충격이 예상되어도 사회적 이견, 근시안적 접근 등으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진

☞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는 現 시점에 맞는 신규 정책수요 발굴·대응, 구조적 문제 논의, 계속과제 관리 등 필요

-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도 대폭 강화하고, 인구정책 인프라도 강화한 3기 인구정책 TF 운영

참고 1

제1·2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



IV. 제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: 4+α 전략

◇ 「4+α 추진전략」을 통해 3대 인구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·관리하여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

현황	영향	추진전략 및 핵심과제
인구 감소	노동공급 감소	<div><div><div><div>양적 보완</div><div>여성</div><div>▶ 학부모 희망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</div><div>▶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</div></div><div><div>외국인력</div><div>▶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</div><div>▶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</div></div><div><div>고령층</div><div>▶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</div></div><div><div>다양한 고용형태</div><div>▶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</div></div></div><div><div>질적 개선</div><div>평생 학습</div><div>▶ 원스톱 서비스위한 플랫폼간 연계강화</div><div>▶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(규제샌드박스 등)</div></div></div>
	부문별 축소	<div><div><div><div>② 축소사회 대응</div><div>▶ 분야별 다운사이징 적응 위한 제도·산업 정비</div></div><div><div>대학</div><div>▶ 정원 유연화 등 규제완화</div><div>▶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·청산 지원</div></div><div><div>산업</div><div>▶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</div></div><div><div>가족</div><div>▶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</div><div>▶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</div></div></div></div>
지역 소멸	지역 불균형	<div><div><div><div>③ 지역소멸 선제 대응</div><div>▶ 거점도시 육성 + 과소지역 자립역량 강화</div></div><div><div>광역거점</div><div>▶ 거점도시 집중 육성, 초광역권 계획 수립</div><div>▶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</div></div><div><div>소멸지역</div><div>▶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</div><div>▶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</div></div></div></div>
초고령 사회 압박	지속 가능성 저해	<div><div><div><div>④ 지속가능성 제고</div><div>▶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+ 의료·돌봄 수요대응</div></div><div><div>사회보험</div><div>▶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</div><div>▶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</div></div><div><div>의료·돌봄</div><div>▶ 협진 활성화,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</div><div>▶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</div><div>▶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</div></div></div></div>
⑤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▶ 인구통계 관리·분석, 연구기능 강화		

① **(전략 1: 인구절벽 충격 완화)**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을 위해 여성·고령자·외국인 등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 등 생산성 제고

- ▶ (여성) 학부모 희망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,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 개선
- ▶ (외국인) 외국인 활용 관리체계 구축, 지역특화형 비자 마련
- ▶ (고령자)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, 재취업지원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
- ▶ (다양한 고용형태) 플랫폼 4법 추진 등 법·제도 개편
- ▶ (평생학습) 평생교육·직업훈련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, 법제도 정비

② **(전략 2: 축소사회 대응)**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및 1인 가구, 법률혼 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편

- ▶ (대학)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, 정원 유연화 검토, 지역-대학 협업 강화
- ▶ (산업현장 고령화)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, 숙련인력 노하우 DB화
- ▶ (가족다양화)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확대,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

③ **(전략 3: 지역소멸 선제 대응)** 지역소멸, 지역불균형에 대응하여 거점도시 집중 육성과 축소지역 압축도시화를 병행 추진

- ▶ (거점도시)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, 지방행정체제 검토
- ▶ (압축도시화) 농산어촌 주거플랫폼, 지역특화지원 등 패키지 사업 마련

④ **(전략 4: 지속가능성 제고)**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·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고령층 의료·돌봄 강화 등 고령층 건강권 보장

- ▶ (국민연금·건강보험)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, 요양병원 수가개편
- ▶ (고령층 건강권) 고령층 중심 비대면 의료 발전적 방안 마련,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

⑤ **(+α: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)** 연구단 구성, 통계 인프라 개선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

- ▶ (연구단)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구성·운영
- ▶ (통계 인프라)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 등 통계인프라 개선

참고 2

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상 특징

◇ (추진경과) '21.1월 비상경제중대본 통해 3기 TF 추진계획 발표

- '21.2월 Kick-off 회의 통해 3기 TF를 본격 가동하여 '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' 논의중

① [신규과제]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핵심과제 적극 발굴

① (논의범위)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·사회 전 영역에 영향 → 경제 분야 논의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**사회분야 정책논의 대폭 강화**

- 사회분야 정책과제 선정 및 작업반 구성하는 한편, 처음으로 사회분야 간사*(교육부 차관보)를 지정해 관련 대책 마련 주도

* 여성고용반·인적자원반·가족정책반 담당 → 해당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발표

② (정책인프라)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이 중요한 시점 → 정부 정책 역량 강화 위해 처음으로 **연구지원반**을 구성·운영해 논의 지원

-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 관련 전문성 제공 위해 **인구정책연구단***(경인사연·KDI)을 구성해 인구TF 논의지원 및 **별도 연구결과**** 발표

* 6개 팀(총괄팀, 인구정책 총괄·완화팀, 축소사회 대응팀, 지역소멸 선제 대응팀,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팀,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팀) 구성해 인구TF 각 작업반 논의 지원

**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, 고용, 산업구조 영향 분석 및 정책방향

- 통계청 중심으로 인구정책 **통계 인프라**를 **개선***하고, 해외 사례 분석, 국내 인구정책 관련 연구자료 정보제공 등 추진

*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, 정책수요 따른 통계 세분화 등

③ (구조적 이슈) 향후 큰 충격 예상돼도 **당장 문제없으면 논의 부진한 경우** → **구조적 문제**도 적극적으로 논의대상에 포함

- 사회적 이견 등으로 논의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서 **화두 제시***

* 예 :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,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,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검토, 대학 규제완화 추진 등

② [기존과제] 1·2기 TF 발표과제 이행점검 통해 실효성 확보

- 1·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326개 과제(1기 101개, 2기 225개) 전체에 대한 **이행점검** 통해 既 발표 대책의 **연속성, 실효성 확보**

- 이행 부진 과제는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 관리

3기 인구TF 구성·운영방안

□ (출범) '21.2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

□ (구성) TF 본회의 + ①총괄반·②분야별 작업반(8개)·③지원반

- 관계부처 + 관련 연구기관 + 민간 전문가(학계) 등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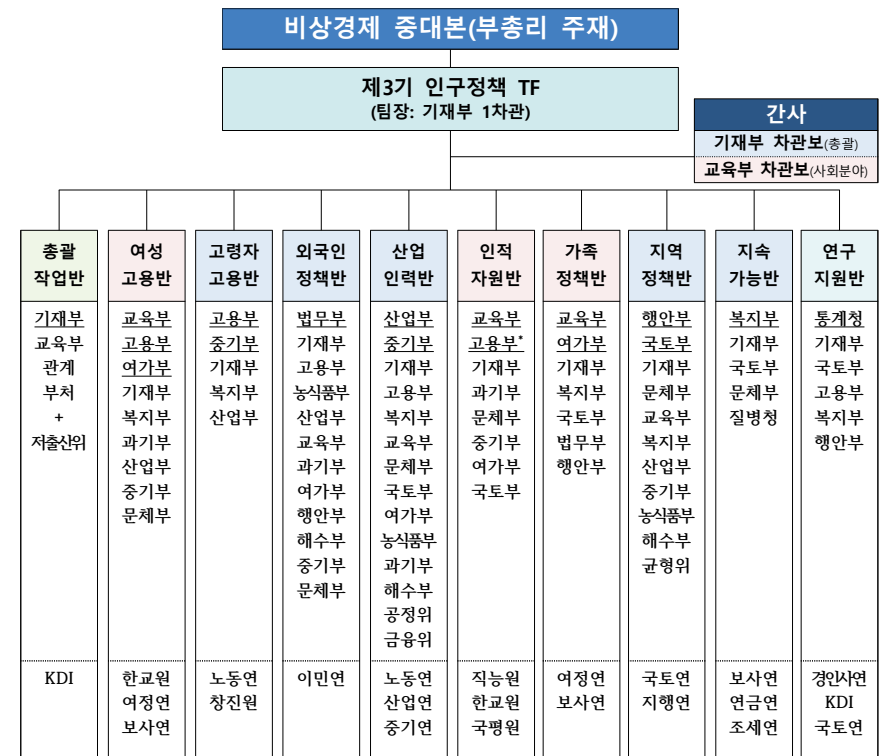
□ (운영) 작업반별 완결된 대책 마련(작업반장 : 주관부처 1급)

→ TF 본회의 승인·발표('21.6월부터 순차 발표)

- 총괄반은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제시,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

- 지원반은 인구구조 관련 통계, 연구·분석자료 등 전문성 제공
→ 각 작업반 논의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

< 3기 인구정책 TF 구성 >



※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(단, 평생교육·직업훈련 과제는 교육부·고용부 공동주관)

V. 주요 추진과제

1. 인구절벽 충격 완화

[생산인구 양적 보완]

① 여성고용 확대

◇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**초등돌봄 개선** 등을 통해 **여성 경력단절**을 완화하고, **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** 병행 추진

* 여성 경력단절 사유('20): (육아)42.5%, (결혼)27.5%, (임신·출산)21.3%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▶ (2기) 육아휴직 분할횟수(1회 → 2회) 확대,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, 예술인·특고 출산급여 지급,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

① 짧은 정규수업 시간*,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에 따른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**교육시간** 확대방안 검토**

* 초등정규수업시수 年 655시간(OECD 평균 804시간)으로 OECD 34개국 중 30위

** 자유놀이 활동,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, 방과후 체육·예술 활동 등

②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**'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' 확대·개선***

* 부처별 돌봄사업 외 지역사회(지자체, 교육청)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추가, 부모가 퇴근시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 다른 돌봄서비스 신청 허용 등

③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**민간 아이돌봄 서비스**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**관리체계 강화방안*** 중장기 검토

* 공공·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파악, 정부 인증제 도입 등

④ 가사근로자법 제정('21.5월)에 따라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**가사 근로자 시장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**

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·성평등 현황 공시제 제도 개선, **STEM(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) 분야 여성진입 강화***

* 신기술 분야 여대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(D-hub) 마련, 여성 청년·청소년 이공계 진출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(진로탐색·경력설계·취창업) 마련 등

② 외국인력 활용

◇ 미래인력·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**우수한 외국인재에 대한 유입장벽을 낮추고,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**

○ 지역특화비자 도입 등 **지자체 수요에 부응한 외국인 정책 강화**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▶ (1기)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,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, 인력부족 업종·직종 중심 비전문인력 장기체류(E-7) 비자전환 규모 확대 등

▶ (2기)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,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 등

① **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 네거티브 방식 도입, 원격근무자(telecommuter) 비자* 신설 등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**

*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·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, 근무지 제공, 동종업계 협업·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정착 유도

②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**'숙련기능인력(E-7-4)'으로의 자격 변경* 확대**

*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, 기술숙련도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

③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에 부합하는 **외국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*** 시범사업 추진

* 지역특화산업 장기근속자, 지역취업 유학생, 지역내 창업자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장기체류 요건 우대

④ **국내 체류 전문자격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업연계 지원** 등을 위한 **외국인력 활용체계(사전등록제 등) 구축 검토**

*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과 연계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구축

⑤ 영주·귀화자를 위한 **사회통합교육 추진,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방안* 검토** 등 외국인 정착여건 개선

* 현재는 공공부조·사회서비스 일부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,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서비스 재설계 검토

③ 고령층 고용 활성화

◇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등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층에 대한 고용활성화 기반 마련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- ▶ (1기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,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(60세 이상, 27만원→30만원),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(22년) 등
- ▶ (2기)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,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추진,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 진행,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 설계 노력

- ① '21.하반기부터 **경사노위 연구회**(가칭 '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')를 통해 **고령자 고용** 및 **임금체계 개편**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
- ②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에 기반한 **고령자 고용** 및 **임금체계 개편** 관련 **사회적 논의** 추진

④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권익보호

◇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로부터 안정적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체계 마련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①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**플랫폼 4법 추진*** 등 개별 법·제도 개편**
- ②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*, 플랫폼 기업 공제회 설립, 종사자 권리구제 센터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
- ③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시행성과를 고려하여 **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** 마련 검토

*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, 직업안정법, 고용정책기본법, 근로복지기본법

**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, 산재보험 적용검토, 플랫폼종사자 직업훈련 제공 등

*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

[생산인력의 생산성 제고]

① 평생학습 지원강화

◇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정비, 수요자 친화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국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- ▶ (1기)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(학습경험인증제 등),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,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등
- ▶ (2기) 평생교육·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, 대학·기업간 공동교육 과정 개발, 내일배움카드-평생교육 바우처 연계방안 마련 등

- ① 전 국민이 평생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**법적 근거***를 마련하고, **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**** 및 **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강화**

* '평생교육법 시행령' 및 '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' 개정 추진

** 실업자·근로자 대상 직무훈련 → 전국민 포괄적 직무기초능력

- ② 수요자가 **원스톱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여 이력을 관리**할 수 있도록 **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** 추진

* 내일배움카드-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한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, 전문대-폴리텍 연계 강화, 핵심 플랫폼(고용부 HRD-Net,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)간 상호 연계

- ③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**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·운영**할 수 있는 **규제 샌드박스*** 도입 추진

* (예) **편입학**: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 확대
학점: 선행학습시간제등록 학점 누적 관리 → 추후 정규과정 입학시 학점에 반영
학사 운영: 야간·주말 수업, 블렌디드 러닝, 집중이수제, 마이크로디그리 등
학습장소: 학교밖 학습장 개설·운영 일부 허용

2. 축소사회 대응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: 학령인구·병역자원 감소 대응

- ▶ (학령인구)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,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,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
- ▶ (병역자원)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,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, 전환복무(의경·해경 등) 및 대체복무(산업기능요원 등) 적정수준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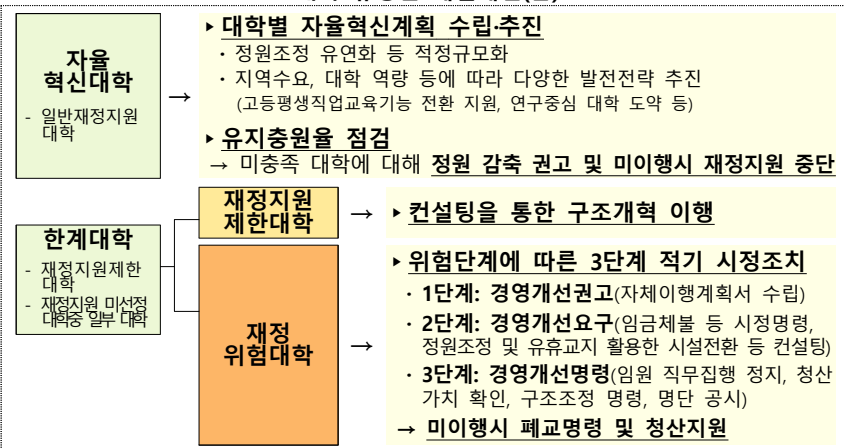
① 대학 체질개선

- ◇ 학령인구 감소로 현실화된 대학 미충원에 대응하여, 대학별 다운사이징 유도 및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절차를 체계화
- ◇ 동시에 지역-대학 협업, 공유협력 등을 통한 질적 개선 지원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① 대학 기본역량진단, 유지충원을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정원 유연화* 등 적정 규모화 유도
 - * 학부-대학원간 정원조정, 동일법인 대학간 정원조정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
- ② 교육부실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 폐교·청산 지원
 - * 교직원 임금체불 등 채무우선변제를 위한 청산용자금 지원, 폐교통합관리 시스템('22년 구축예정)을 통한 폐교자산 매각 등 지원
- ③ 국립대학법 제정, 국립대간 공동교육혁신체제*(연합대학 등) 전환 등을 통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국립대 혁신 추진
 - * 권역내 2개이상 국립대간 학사구조 개편, 교원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등 마련
- ④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
 - *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전문대 학과 개편,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 학습자 온·오프라인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< 대학 유형별 체질개선(안) >



②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

- ◇ 산업 현장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①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, ②인력감소 보완 위한 스마트화 등 생산성 제고 추진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①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,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및 숙련기술 전수 등 숙련기술 및 인력 발굴·활용 확대 지원
- ② 고령화 업종 디지털 전환 지원, 뿌리특화 생산성경영인증 체계* 개발·보급 등 숙련기술 분야 생산성 혁신역량 강화 지원
 - * 중견·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·분석해 인증해주는 제도

③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

- ◇ 비혼동거·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도록 법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1인 가구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①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상 가족개념을 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 속 차별적 제도 개선
 - * 가족 정의를 혼인·혈연·입양 이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,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·부양·교육 등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
- ② 비혼동거 등 생활관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 검토
 - * 사실상 가족에 대한 정의, 인적·재산적 효력, 관계 증명 등에 관한 사항
- ③ 1인 가구 대상 소득·주거·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 강화* 및 법·제도상 차별적 요인 해소**

* 청년특화주택·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, 1인가구 사회통계 작성 등

**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1인가구 소득지원 강화(1~2인 가구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)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

3. 지역소멸 선제 대응

◇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, 초광역권계획 수립, 행정통합 등을 통해 발전이익 극대화

◇ 소멸위기 지역은 지역의 필요·선택에 따른 특화사업 지원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- ▶ (1기)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, 민·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, 공공·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 구축,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
- ▶ (2기)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('22년) 및 정보체계·거래망 구축,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, 대규모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

①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

① 광역자치단체간 **초광역권계획*** 수립을 위한 **국토기본법 개정** 추진

* 2개 이상 광역자치체간 합의한 공간구상 및 협력사항 등을 담은 지역주도 광역권 협업 계획

② **특별자치단체 활성화** 등 지자체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 **지역차원의 행정통합 논의 지원** 등 **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**

*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 (지방자치법 제2조 신설, '22년부터 시행)

③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 기능이 복합된 **도심융합 특구***를 조성하여 **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**으로 육성

* 5개 광역시 중 대구·광주대전은 사업지구 선정완료, 부산·울산은 연내 선정협의 중

②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

① **생활인프라 공동이용** 등 **생활권 단위 연계·협력 활성화**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**시책·제도 특례*** 발굴

*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, 중소기업 지방세제 감면, 초·중고등학교 통합운영 등

② 농산어촌 지역 **생활거점 구축**을 위한 **주거플랫폼*** 사업 추진 및 노후주택 정비 및 축사·공장 난립해소를 위한 **농촌공간계획 수립**

*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·생활SOC사업 등 연계

③ **지역의 필요 및 선택**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**패키지로 지원**하는 **지역특화사업*** 및 **농촌협약**** 추진

* 지자체 주도로 위기극복 계획(50여개 시책사업 중 필요사업 선택)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연계 및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

**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

4. 지속가능성 제고

①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

◇ 고령자 급증에 따른 **지출확대·기금감소가 예상됨**에 따라 **국민연금 수익성 제고** 및 **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** 추진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- ▶ (1기)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,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

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**자산배분체계를 개선**하고, 투자정책·위험관리 전문위원회 내실화

②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**요양병원 수가개편**과 **예방적 건강관리 강화**를 위한 **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*** 추진

* (시범사업 대상자)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, (건강실천) 건강프로그램 이수, 걸음수 등 (인센티브) 연간 5~6만원(1인) 포인트 지급 등

② 고령층 건강권 보장

◇ (의료) 고령층이 **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**받을 수 있도록 **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** 추진

◇ 제1·2기 TF 논의과제

- ▶ (2기) IoT, 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, 돌봄로봇 보급 추진

① (재택의료 강화)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, **ICT 활용 의료 취약지 의사·의료인간 협진 활성화**, **재택의료센터(가칭)*** 도입 검토

* 의원,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, 거동불편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·돌봄 서비스를 주기적·지속적으로 제공 → 거주공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

② (지역책임병원)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·입원 등이 가능한 **지역책임병원(가칭) 지정·육성**

* 대도시(서울·광역시)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

③ (비대면 의료) **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**하고 **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** 중심으로 **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**

* 복지부와 의료계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,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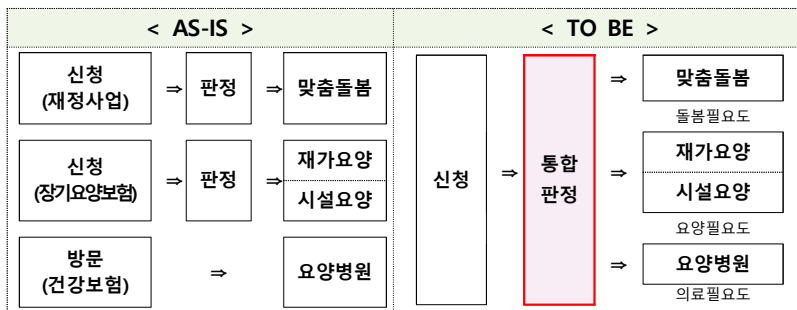
◇ (돌봄)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필요도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, 양질의 돌봄인력 확충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❶ 고령층에게 돌봄·요양·의료 필요도*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**통합판정체계를 도입****하고, **각 서비스 간 연계** 제공

* 돌봄·요양·의료 서비스를 재정기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하여 필요도와 무관하게 요양·의료서비스의 과다·과소 이용 발생 등 비효율성 발생

** 장기요양 신청 노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추진('21.10월)



- ❷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양성 경로 확대, 요양보호사 중간 관리자 양성, 보수·양성교육 내실화 등 추진

* 다양한 연령층의 인력 확보 노력, 내국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보충적 활용방안도 검토

+ α.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

◇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 인프라 개선 및 연구 기능 강화

◇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

- ❶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, 추계주기 단축(5년→2년), 대상·분야별 통계 세분화 등 통계인프라 개선
- ❷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·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지속 연구

VI. 향후 발표 및 추진계획

1. 발표 계획

- 이번 총괄 안전을 포함하여 4대 전략별 과제(총 13개)들을 '21.7월부터 4편의 시리즈로 순차 발표

- ❶ (1편: 총괄)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 방향(2개 과제, 7월)

- ▶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(기재부)
- ▶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(법무부)

- ❷ (2편: 전략1) 인구절벽 충격완화 대응 방안(4개 과제, 7월)

- ▶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(고용부)
- ▶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(고용부)
- ▶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(여가부)
- ▶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(교육부·고용부)

- ❸ (3편: 전략2) 축소사회 대응 방안 및 추진기반 확충(5개 과제, 8월)

- ▶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(산업부)
- ▶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(교육부)
- ▶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(여가부)
- ▶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(통계청)
- ▶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고용·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(경인사연)

- ❹ (4편: 전략3+4) 지역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(2개 과제, 9월)

- ▶ 지역소멸 대응(국토부·행안부)
- ▶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(복지부)

- 각 전략별 총괄 안전·과제는 경제중대본에서 논의 후, 과제 성격에 따라 경제중대본·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

2. 추진 계획

- 발표 과제들은 하반기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되,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조정 검토
- 발표 과제는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주기적 점검(분기 1회)
- 인구정책 관련 포럼 개최(10월말, 경인사연),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경각심 제고 및 정책과제 추가 발굴

[발표 일정(안)]

안건		발표	일정
❶ 총괄 안건 및 외국인력 부족 대응		경제 중대본	7.7일
▶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(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)	기재부		
▶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	법무부		
❷ 인구절벽 충격 완화		경제 중대본	7월말
▶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소	고용부		
▶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	고용부		
▶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	여가부	사회관계 장관회의	7월말
▶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	교육부 고용부		
❸ 축소사회 대응 및 추진기반 확충		경제 중대본	8월말
▶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	산업부		
▶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	통계청		
▶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고용·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	경인사연	사회관계 장관회의	8월말
▶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	교육부		
▶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	여가부		
❹ 지역소멸 선제대응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	경제 중대본	9월 중순
▶ 지역소멸 대응	국토부 행안부		
▶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복지부		

참고 3

인구정책 TF 1, 2, 3기 과제

현황	대응전략	분야	1, 2기 주요과제	3기 추진과제
인구 감소	노동공급 감소 ↓ 인구절벽 충격완화	여성	▶ (27)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(육아 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,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), 경력단절여성 재취업·창업지원 서비스 확대	▶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▶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▶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, STEM분야 여성진입강화
		고령자	▶ (17)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(본7당 27~30만원), 고용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(1인당 월 30만원) ▶ (27) (가칭)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, 65~69세, 70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통계 세분화, 계속고용 제도 등 고령자 고용 연장방안 지속 논의	▶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▶ 1,000인 이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
		외국인	▶ (17)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및 혜택제공, 성실재입국 제한기간(現 3개월) 단축,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규모 확대 ▶ (27)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,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	▶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▶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 ▶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원격근무자(telecommuter) 비자 신설
		비정형 근로	▶ (27) 유연근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,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대상 확대	▶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
		학습·훈련	▶ (17)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(학습경험인증제 등),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,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▶ (27) 평생교육·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, 대학·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기업 맞춤형 협약반 운영	▶ 원스톱 서비스 위한 플랫폼 간 연계 강화 ▶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,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강화 ▶ 대학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(규제 샌드박스 등)
		교육	▶ (17)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,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	▶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규제 완화 ▶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 폐교·청산 지원
		국방	▶ (17)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,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, 대체복무 감축	
		가구	▶ (27)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(非 인구TF)	▶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 확대 ▶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
		산업 R&D	▶ (17)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수립, 스마트 공장 및 산단 구축, 스마트인력 양성 ▶ (27) 디지털 혁신 전문가 양성 및 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 기술 기반 노동력 중장기급 개발·보급	▶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▶ 디지털 뿌리영장 교육센터 구축
		부문별 축소 ↓ 축소사회 대응		
지역 소멸	지역불균형 ↓ 지역소멸 선제 대응	지역	▶ (17)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, 민·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, 공공·생활서비스 집약·순환연결체계 구축,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▶ (27) '22년까지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, 빈집 정보체계 및 거래망체계 구축,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, 대규모 자본필요,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	▶ 거점도시 집중 육성, 초광역권 계획 수립 ▶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계 검토 ▶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▶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
		건강·돌봄	▶ (27) IoT·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,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추진	▶ 협진 활성화,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▶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▶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관리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
초고령 사회 임박	지속가능성 저해 ↓ 지속가능성 제고	고령층 친화환경 조성	▶ (17)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, 퇴직·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, 재능나눔 일자리 참여연령 하향조정(65→60세) ▶ (27) 중앙보행성 설치 확대,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,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테스트 현실화,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 출시,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연령 5세 내외 상향조정(現 65세), 경로우대제도 개선논의 착수	▶ 일자리+생활 SOC 사업 등을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▶ 노후주택과 측사 등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
		재정 및 연금·보험	▶ (17)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 및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	▶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▶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
		고령 친화산업	▶ (17)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, 신약의료기기, 로봇 등 융합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▶ (27) 고령친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·운영, 고령친화 제품·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추진	